

★ The Hope Report 22호 [2013. 11]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주민참여 정책개발을 실험한 서울 '동북4구 100인회의'

목차

개요

1. 해외 주민참여 정책개발 동향
2. 국내 주민참여 정책개발 사례
3. '동북4구 100인회의' 진행과정
4. '동북4구 100인회의' 결과
5. 시사점과 제언

작성 | 뿌리센터

홍선 센터장 | theresa@makehope.org
이창한 연구위원 | happyhanmin@makehope.org
김보영 선임연구원 | boykim@makehope.org
김지현 연구원 | kimjihun@makehope.org
송지영 연구원 | jyyoung@makehope.org
우성희 연구원 | sunny02@makehope.org
장우연 연구원 | wy_chang@makehope.org



개요

“늘 오는 사람이 온다.” “동원되는 데가 너무 많아 힘들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공무원이나 참여를 요청받는 주민 사이에서 이렇게 불멘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한편,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전히 높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밀양 송전탑 설치나 진주의료원 폐지를 둘러싼 갈등, 용산 도시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를 볼 때, 주민이 생존을 걸고 표명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속의나 협의가 없이 강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주민참여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시민들이 참여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참여 절차를 만들지 못했거나, 정책과정의 핵심에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과정마다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이 있는데, 층위별로 골고루 주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OECD는 정책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정책의 ‘설계’와 ‘집행’ 그리고 ‘평가’다. 기존에 한국에서 이뤄진 주민참여(민원이나 주민신고, 운영위원회나 공청회 등)는 주로 정책 ‘집행’과 ‘평가’에 치우친 반면, ‘설계’에는 미흡했다¹. 설계 과정에도 주민참여인 주민제안제도나 감사 청구제,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참여 절차가 번거로워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 마을 단위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다양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주민참여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중 하나의 실험 사례로 희망제작소가 주관했던 서울 ‘동북4구 100인회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주민참여 정책개발 동향

대의제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방법을

1 강인성,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한국행정학보 42권 3호 pp.217~218

발전시켜왔다. 또한 남미나 아프리카 등 비 유럽국가에서도 정치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주민참여예산제’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시에서 시작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타운 미팅(Town Meeting)은 역사가 오랜 주민참여 방법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마을에서 이뤄지던 의사결정 방식으로, 각 지역 주민이 마을 회의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예산을 심사하며 법을 제정하는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주민이 적어져서 최근에는 의미와 영향력이 퇴색됐다.

이 전통과 IT기술을 접목한 것이 ‘21세기 타운 미팅’이다. 아메리카스피크스(America Speaks)라는 단체가 시민 목소리를 직접 정책결정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대규모 토론기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9·11 참사 후 폐허가 된 ‘그라운드 제로’의 재건축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 ‘Listening to the city(도시를 듣다)’, 허리케인 카타리나로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주제로 한 ‘Rebuilding New Orleans(뉴올리언스 재건축하기)’ 등에 활용되었다. 방법은 테이블별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전자투표기를 통해 다수결로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토론방식은 국내에서도 소개되어 서울시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1000인의 원탁회의’,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정책만민공동회’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이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주민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럽 전역의 도시를 돌며 2백~5백여 명 시민과 전문가, 지역 정치인과 토론하는 장을 열고 있다. 유럽연합이 되고 나서 유럽 각국 시민들의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장은 시민 대화(Citizen’s Dialogue)를 제안한 것이다. 이 행사는 2013년 현재 웨비나(webinar, 온라인 세미나)로 중계되고 있다².

또한, 유럽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의 입법청원(European Citizens’ Initiative)을 받았다. 투표권이 있는 유럽 시민이 제안을 발의하고 7개국에 걸쳐 10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유럽연

2 Citizen’s Dialogue



합의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³.

독일의 뷔르거포럼(Bürger Forum: 시민포럼)은 전국 규모의 온오프라인 시민토론이다. 베텔스만 재단이 2008년 개최한 후, 2011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전 국민 토론행사로 확대했다. 독일 사회의 통합을 주제로 전국 25개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주민 제안을 받고 토론, 표결한 후 여기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시민 400여 명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했다. 이 토론은 방송으로 생중계됐고 전국에서 온라인 투표가 이뤄졌다.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지역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시민 리포트'를 발간했다.

지방정부 단위 사례로는 영국의 뉴캐슬 시에서 공공예산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U-decide가 있다. 이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시내 각 지역을 돌아가며 열리는데, 시 예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시민이 의견을 내고 투표로 선정한다. 매년 약 100~200명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돕는다. 어린이·청소년들도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예를 들어 등하갯길에 학교폭력을 당하던 아이들이 참가해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시로 썼고 그걸 시집으로 만들었다. 이는 공무원들은 생각해내지 못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⁴.

3 [European Citizens' Initiative](#)

4 [희망제작소 교육센터, '시민의 정책참여 해외 사례'](#)

이 외에도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찬반 논의를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다. 전 세계 시민참여방법 사례를 모은 웹사이트 ‘파티시페디아(Participedia)’를 참고하면 다양한 사례를 배울 수 있다⁵. 또한 ‘참여를 위한 세계 연대(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PG Exchange’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제안 툴킷과 사례가 소개되어있다⁶.



2. 국내 주민참여 정책개발 사례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민참여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1990년대 말부터 2천 년대 중반까지는 전 사회적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는 시도가 활발했다. 도시계획이나 중요 국책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묻는 방법과 갈등관리 방법이 논의되고 시도되었다.

유명한 사례로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공론조사가 꼽힌다. 공론조사는 2천~3천 명가량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그 가운데 소수 참여자들에게 갈등 사안과 관련한 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하고 갈등 사안에 대해 토론하게 한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론조사는 원래 방식보다는 기간이나 인원을 축소하여 진행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나 부산시 시민단체 등은 친수형을 선호했고, 시와 상공인 등은 상업용지 확보를 주장했다. 공론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친수형 중심으로 하되, 2안의 일부요소를 도입한 절충형으로 결정했다⁷.

5 [Participedia](#)

6 [PG Exchange](#)

7 김춘섭, ‘정책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부산 북항 재개발에 대한 공론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리서치, Research Note 2009년 봄호

당시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많은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형태의 주민참여가 국가정책이나 거대담론에 치우쳤다는 점, 전문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다는 점, 토론의 결과가 곧 정책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결국 북항 재개발 건도 우여곡절을 거쳐 주민이 만든 안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수정·변경되었다⁸.

지역 단위에서 유명한 사례로 ‘울산북구 시민배심원제도’가 있다. 울산 북구청에서 자체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갈등 끝에 2004년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구청과 주민대표가 합의한 43명 배심원단을 꾸렸다. 15일간 5차례 모여 주민과 구청의 진술을 듣고 현장 견학, 공청회와 자체회의 등을 진행한 후 찬반투표로 결정했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여 자원화시설이 건립됐다⁹. 최근 수원에서도 지역갈등 현안에 대해 평결하는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2천 년대 후반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시민참여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지방 풀뿌리 단위에서는 주민참여가 발전해 왔다. 풀뿌리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작은 단위의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분위기가 고취되고 있다.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점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 정책제안 기회를 만들고 있다. 희망제작소 등이 중심이 된 시민창안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원탁회의 등 민선 5기는 어느 때보다 주민의 정책참여가 활발해졌다. 수원, 부천, 정읍 등에서 열렸던 시민창안대회는 기존의 시민 제안이 단편적인 것에 그친 데 비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수 제안을 직접 정책으로 연결시키거나 프로젝트 실행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서울시는 2012년 ‘여럿이 함께하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창안대회를 열었다. 웹사이트에서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총 37개 아이디어가 ‘2012 서울시민의제’로 선정되었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팀은 인큐베이팅 중간지원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2달 동안 사업계획을 숙

8 부산 경실련, ‘북항재개발, 수익성인가 공공성인가?’

9 하지만 이미 갈등이 격화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완전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함. (김소연, ‘성공한 합의제도?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의 평가와 함의’, 시민사회와 NGO, 2006년 4권 2호)



성시켰다. 초기 종자돈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펀딩’ 기회를 제공하여 총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시민 후원금 기부로 모였고, 서울시도 매칭펀드를 통해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¹⁰.

3. ‘동북4구 100인회의’ 진행과정

서울 동북부에 있는 4개 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는 지난 7월 주민에게 지역의 공동발전방안을 묻는 ‘100인회의’를 개최했다. 서로 인접한 4구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반영하는 과정을 희망제작소가 맡아서 실행했다.

동북4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주민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타운미팅 방식으로 주민 300인을 초청하여 원탁회의를 했고, 성북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 8개 분야별 ‘열린토론회’를 진행했다. 동북4구가 함께 ‘사회적경제 열린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들 토론회에서 제안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동북4구 100인회의’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프로그램 설계

무엇보다 목적에 맞는 토론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다. ‘100인회의’는 동북4구 정책연구단이 연구

10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2012 서울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벚꽃엔딩’



〈100인회의의 진행과정〉

에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문가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아래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 1) 주민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는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2) 숙의형 토론: 서로의 의견에 살을 덧붙여가며 토론에 깊이를 더한다.
- 3) 준비된 토론자: 주민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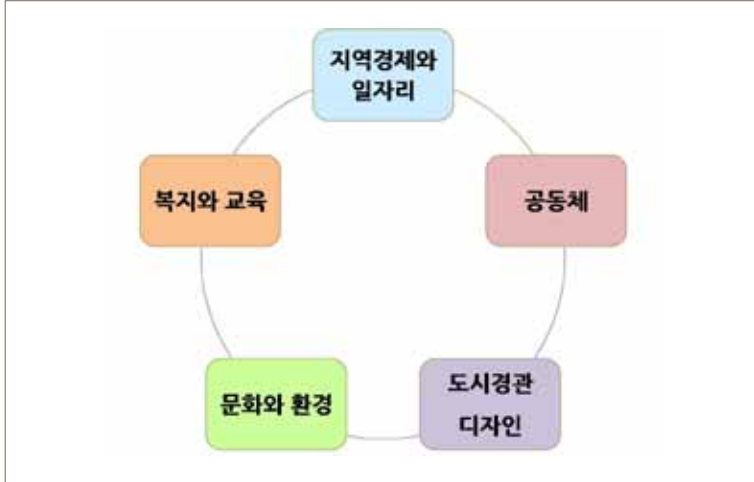
토론 설계는 기존에 희망제작소가 해 온 마을만들기 주민워크숍,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인들의 토론회 ‘별별솔루션’ 등에서 힌트를 얻었다. 또, 토론 참여자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를 공유할 게시판을 만들고, 테이블에서 만나 주제별 논의를 열고 닫는 오픈스페이스테크놀로지(OST) 방법과 월드카페(같은 주제에 대해 소그룹으로 토의를 하고, 다시 테이블을 이동하여 모든 토론내용을 전체가 공유하는 방법)를 차용했다.

의제 정하기

주제는 ‘동북4구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할 일’을 찾는 것이었다. 토론 참여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인원과 시간관계상 당일에 주제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악했다.

성북구를 비롯해 도봉구와 노원구에서는 예전에 주민이 대거 참여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 제안된 의견과 각 구의 주민참여예산 의견, 홈페이지 민원과 주민제안을 모았다. 이렇게 동

북4구 주민의 공통 관심사를 수집하여 5개 분야 50개 주제로 추려냈다. 당일 토론자들이 이 가운데 원하는 주제를 골라 토론하게 했다.



〈5대 토론분야〉

<p>A. 지역경제와 일자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일자리 부족 2.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발전 지원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4.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5. 협동조합, 공유경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6. 지역 특화산업 육성 7. 관내 생산되는 물품 유통과 판로 확대 8.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9. 지역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의 적극 활용 10. 관내 크고 작은 상업시설 부족
<p>B. 복지과 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와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 부족 2.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공간 확충 필요 3. 학교 간 교육환경 편차, 사교육 의존이 심함 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함 5.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필요 6. 주민 모두를 위한 열린 교육 프로그램이 적음 7.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 개선 8. 경로당 외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갈 곳 부재 9.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대학 확충 10. 우울증과 고독, 자살 예방

C. 문화와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문제의 해소 2. 인구에 비해 부족한 도서관문제의 해소 3. 일상과 멀어진 문화 예술의 개선 4.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과 운동프로그램 마련 5. 산과 강 등 자연환경의 생태적 보존 및 활용 6. 동네별, 계층별 문화격차 해소 7. 난방비와 에너지 절감 8.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기 9. 주민도 즐기고 방문객도 찾을 축제 만들기 10.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D. 도시경관 디자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 주변 환경개선(문화의 거리? 유흥의 거리?) 2. 주차난 해결(주차장인지, 골목길인지) 3. 어두컴컴한 놀이터와 골목길 개선 4. 도시 디자인에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 참여 5. 자전거 타기 좋은 여건 만들기 6. 지역에 있는 유용한 시설을 한눈에 알 방법은? 7. 편리하지만 길을 막는 노점상 문제 해결 8. 개성 있고 조화로운 간판은? 9. 장애인과 약자가 다니기 쉬운 거리 만들기 10. 재해 없는 안전한 거리 만들기
E. 공동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만들기 2. 동네 모임 활성화 3.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4. 주민공부모임 활성화 5. 기 활성화된 마을공동체를 더 발전시킴 6. 세대 간 소통과 공감 7.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활성화 8. 낙후한 지역 이미지와 낮은 자긍심 개선 9. 행정과 주민 간 소통, 주민 참여 활성화 10. 동네와 주민의 소식을 전하는 마을매체 활성화

* 녹색 의제가 토론에서 선정 · 논의되었음

〈동북4구 100인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숙의를 위해 준비된 토론자

동북4구에 대한 기본정보와 토론 방법을 담아 사전 자료집을 만들었다. 참여 신청한 주민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전에 자료를 보내고 토론 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여러 차례 당부했다. 토론회 참여자 상당수가 자료집을 미리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자료를 숙지함으로써 토론자가 논의할 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론 진행 방법

테이블 위에 논의할 의제를 놓아두고, 참여자가 의제를 보고 자신이 토론하고 싶은 테이블을 정하도록 했다. 한 테이블에 4~8명 정도 앉았고, '테이블 진행자(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을 이끌었다. 자기소개 후 놓여있는 의제 중에 토론할 주제를 정했다.

의제를 정하면 먼저 '지금 이 의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말했다. 그 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포스트잇에 적었다. 전지를 반으로 나눠, 왼쪽에는 '문제점'을, 오른쪽에는 '원인분석'을 논의한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다.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뒤 해결책을 토론했다. 테이블 구성원들이 제안한 모든 문제를 듣고 난 후 비슷한 유형끼리 묶었다. 이 중 가장 좋은 제안에 스티커를 붙여 2~3가지를 뽑았다. 선정된 제안은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에 발표되었지만 나머지 제안도 빠짐없이 보고서에 기록해 후속 연구와 정책 구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테이블마다 2가지 의제를 뽑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한 후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내용을 취합해 사회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테이블 진행자 (퍼실리테이터)

토론을 원활하게 할 진행자를 테이블마다 배치했다. 테이블 진행자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말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해당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동북4구 연구진이 테이블 진행을 맡았다. 테이블 진행자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동북4구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 진행을 연습하도록 했다.

테이블 진행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은 자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기 견해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산이나 법령을 고려했을 때 주민이 설령 실현 불가능한 의견을 내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도록 교육했다.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떠나 일단 주민이 자유롭게 창안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진행자의 역할이다.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도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동북4구 100인회의’ 결과

토론자들의 녹취를 살펴보면 무척 열띤 토론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느낀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며 토론했고, 논의의 방향성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제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주민의 제안은 비교적 구체적이었다.

제안 결과는 ‘4개 구청 협의회가 함께 해결할 과제’ ‘개별 구청이 해결할 문제’ ‘연구진이 연구할 차원의 과제’로 나뉘서 종류별로 다시 묶었다.

아쉬운 점은 토론자들이 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다 보니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주제를 넘나들며 토론 내용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이 합쳐져 더욱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테이블에서 나온 제안을 토론회 이후에도 모여서 더 논의를 하고 직접 정책으로 실현해 보는 과정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주제	의제	해결책
A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역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 적극 활용방안	①지역 사회적 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②교육 및 장기적인 인재육성 계획 ③지역 랜드마크 필요 ④시설과 자원 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 부족	①동북4구 일자리 협의체 구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②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역 내 젊은이와 예술가 연계해 활성화 ③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매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①동대표, 부녀회장이 용역업체 선정시 직접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 ②취약계층 선발 기준 및 방법 변화(발로 뛰는 사람을 뽑기)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	①지역경제조직 네트워크 연계(직군별 동북4구 경제조직 모임) ②기업 지원시 선발기준 현실화: 여러 기관이 고른 혜택 받도록 공무원 인식개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①지역식당 경영 매뉴얼 마련 ②상인협의회 중심으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배달
	관내 크고 작은 상업시설 부족	①상인협의회 중심 공동대응: 지역상인 교육, 홍보 ②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③도시재정비를 통해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적 대응 필요
B 복지와 교육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확충	①주민과 시민단체 의견 수렴 기구 ②학생과 봉사기구가 함께하는 협의체 ③사교육 전문가들과 협의
	유아와 아동 돌봄 지원 부족	①돌봄 파트타임, 전업주부 활용 ②궁극적으로 돌봄을 가정시스템으로 전환 ③돌봄에 필요한 전문 강사 재능기부자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①청소년 입장에서 좋아할만한 청소년센터 제대로 만들기 ②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③청소년 동아리의 체계적 연계
	학교 간 교육환경 편차와 사교육 의존	①구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만들기 ②학부모와 학생이 방과후 학교 자체 운영 ③학부모의 인식변화: '엄마학교'
	주민 모두를 위한 열린 교육프로그램이 적음	①수요자 중심의 욕구조사 필요 ②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볼 매체 ③직장인이 이용할 현실적인 교육시간(주말 · 야간)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대학 확충	①공간개방, 공간 활용도를 높임 ②전문적 교육 이외에 인문학교육 등 ③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도록 구청이 매개 ④지역과 대학의 협의체
	도움이 필요한 분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함	①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②복지담당공무원 확충 ③사회복지 제공자들의 네트워크 필요 ④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B 복지와 교육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 배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예산확충 ② 장애인관련단체 네트워킹 힘모으기 ③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주민도 즐기고 방문객도 찾을 축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술가, 마을공동체, 대학, 주민이 협력해 주체 형성 ② 지역 스토리 발굴 ③ 지역 공간 개방
C 문화와 환경	일상과 멀어진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 ② 민간 협력 문화예술 활성화 ③ 다양한 문화예술 페스티벌로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 시설과 운동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소재 대학생 체육예술 실습과 연계 ② 시설 이용자의 재능기부로 시설관리 ③ 시설이용 및 올바른 운동법 교육
	인구에 비해 부족한 도서관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작은도서관 통합, 책 분류 세분화 ② 개인 소장 책을 공유할 제도 마련 ③ 구별 특화된 도서관 (강북: 민주화, 성북: 인권, 노원: 교육, 도봉: 자연)
	산과 강 자연환경의 생태적 보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교육, 국립공원 직원교육 ② 위험시설물 조사 관리, 시민방범대·일자리 창출 ③ 자연휴식제 도입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가능 도시계획수립 위해 법 개선 ② 도시텃밭: 유류지 조사관리, 구청이 홍보, 도시농부 장터 ③ 녹지확보: 공원에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전환, 다년생 가로수 식재 ④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동북4구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어두컴컴한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체적, 실질적 시설계획 (예: 가로등에 비상전환번호 설치 등) ② 골목을 열린 공간으로 특화 (예: 마을 공동 꽃밭, 평상 설치) ③ 놀이터 관리주체와 주민의 정기 모임 (마을 모임 공간으로 놀이터 활용,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터 프로그램)
D 도시경관 디자인	도시디자인에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 참여할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소재 대학의 전문가 + 지역주민 공동 참여 계획 ② 참여범위를 세분화하여 자신의 생활권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 ③ 주민참여 프로세스 개선: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 의무화
E 공동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에 주민 자율성을 보장 제도개선 ② 열린 소모임을 많이 만들 ③ 모두가 이용할 공간으로: 노인(정),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시설), 여성 등 계층 세분화한 공간이 주민 간 벽을 만들
	주민 공부모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능기부 사람발굴과 지원: 동북4구 인적자원 DB구축 ② 정보공유 통로 형성: 개설 가능 공부모임을 올리고 의견 낼 플랫폼 마련
	동네모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통할 공간조성 지원 투자 ② 공동주택 등 마을 공동체사업 지원 ③ 이웃관계 회복 교육

E 공동체	행정과 주민 간 소통, 주민참여 활성화	①지자체 내 주민과 소통업무를 총괄할 기구 설치 ②주민참여프로그램 개설(100인회의 등) ③기존 단체가 이층삼중 참여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 참여 통로(예: 주민참여예산제)
	기 활성화된 마을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	①교육강화(공무원 마인드 개혁, 기부장적 마을활동가 성평등 교육) ②행정이 성과중심 평가 지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속적 지원체계)
	세대 간 소통과 공감	①세대간 역사사지 할 다양한 소통프로그램 개발 ②보편 복지와 돌봄의 사회화 강화 · 지역 안에서 노인과 아동 등 서로 돌보도록

〈100인의 안 요약 - 의제별 해결책〉

5. 시사점과 제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가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제안을 모아도 실행할지 말지는 여전히 행정의 선택에 달렸다. 주민의 제안이 반영되기 어렵다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토론자 모두 자신들의 열띤 토론 결과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고, 향후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를 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의 정책제안 방법에 대해 얻은 시사점은 첫째, 주민이 발의한 제안을 실현할 절차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기획과정에서 토론의 결과를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의견보다 조직된 의견이 질이 높다. 단발적인 제안보다 여럿의 토론과 숙고를 거친 의견은 단단하고 실천력이 있었다. 당일 토론에 참가한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주기를 원했다.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실천에 옮기기까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상당수 제안이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파악하지 못한 작지만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론을 통해 그러한 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추상적인 주제나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인 질문

을 던지거나, 해결해야 할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지속적인 참여 통로가 있어야 한다. 토론 참석자 가운데에는 기존에 시·군·구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도 많았다. 이러한 주민이 토론에 열성적으로 임했다. 앞으로 이런 주민을 포함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트렌드일까? 여러 곳에서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작고 실천적인 참여방법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하려는 행정의 의지다. 아무리 참신한 방법이라 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이벤트로 남고 말 것이다. *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변혁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click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